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8. 8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 ▶ 목 차 ◀

<b>I . 위원회 구성</b> .....	1
1. 구성목적 .....	1
2. 구성경위 .....	1
3. 위원명단 .....	2
4. 직원명단 .....	3
<b>II . 위원회 활동경과</b> .....	4
1. 전체회의 .....	4
2. 간담회 및 현장활동 .....	5
<b>III . 위원회 활동내용</b> .....	6
1. 전체회의 .....	6
(1) 제1차 전체회의 .....	6
(2) 제2차 전체회의 .....	7
(3) 제3차 전체회의 .....	14
(4) 제4차 전체회의 .....	18
(5) 제5차 전체회의 .....	21
(6) 제6차 전체회의 .....	26
(7) 제7차 전체회의 .....	34
2. 간담회 및 현장활동 .....	42
(1) 중소기업분야 간담회 및 현장활동 .....	42
(2) 농·수·축산분야 간담회 및 현장활동 .....	45
3. 특기사항-유가청문회 개최 관련 .....	47

<b>IV.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b> .....	<b>48</b>
1.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	48
2. 고유가대책 .....	55
3. 중소기업 지원대책 .....	63
4. 일반행정부문 지원대책 .....	75
5. 국토해양부문 지원대책 .....	79
6. 교육부문 저소득층 지원대책 .....	84
7. 농어가 지원대책 .....	92

# I. 위원회 구성

## 1. 구성목적

-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불안해진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2. 구성경위

-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해 물가가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총소득은 감소해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이견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그 효과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국내외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서민생활 안정 관련 대책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0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 제출됨.

- 2008년 7월 10일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 안건이 원안결되어 위원수를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08년 8월 14일로 하는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됨.
- 2008년 7월 15일과 16일 의장으로부터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5인과 3인에 대한 선임통보가 각각 있었음.

### 3. 위원명단(18인)

- 2008. 7. 18(금)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선진과창조의모임 김낙성 의원)과 간사(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를 선임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비 고
위원장	선진과창조의모임	김 낙 성	
위 원	한나라당 (9인)	최 경 환	간사
		강 명 순	
		강 석 호	
		나 성 린	
위 원	민주당 (6인)	원 유 철	간사
		윤 석 용	
		이 달 곤	
		이 종 혁	
위 원	선진과창조의모임 (2인,위원장포함)	임 해 규	
		전 병 헌	
		김 희 철	
		오 제 세	
위 원	비교섭단체 (1인)	이 용 섭	
		이 종 결	
		최 철 국	
		김 용 구	
위 원	비교섭단체 (1인)	정 하 균	

#### 4. 직원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권 대 수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관	이 원 탁	”
입법조사관	부이사관	이 계 인	”
”	서기관	곽 흥 식	”
”	”	신 향 진	”
”	”	박 철 호	”
”	”	한 석 현	정무위원회
”	”	정 승 환	재정경제위원회
”	행정사무관	전 완 희	”
”	”	이 강 혁	”
”	”	이 세 진	행정자치위원회
”	”	이 제 봉	산업자원위원회
”	”	박 지 현	”
”	”	윤 상 열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	임 성 현	산업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보	행정주사보	이 철 규	”
사무원	기능6급	이 남 춘	”
”	기능8급	윤 현 주	”
”	기능9급	허 순 남	”

## II. 위원회 활동경과

### 1. 전체회의

- 2008년 7월 10일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이래 8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개최함.

차수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비고
1	2008. 7. 18(금)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위원장 선임 : 김낙성위원장 (선진과창조의모임) ○ 간사 선임 : 최경환(한)·전병현(민) 위원 ○ 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2	2008. 7. 24(목)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현황보고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부사장, 한국가스공 사 부사장 배석답변
3	2008. 7. 28(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현황보고 : 기획재정부	
4	2008. 7. 29(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현황보고 : 행정안전부	
5	2008. 7. 30(수)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현황보고 :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 사 사장, 한국주택공 사 사장 배석답변
6	2008. 7. 31(목)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현황보고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7	2008. 8. 11(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민생관련 종합정책질의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8	2008. 8. 14(목)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간담회 및 현장활동

- 2008. 8. 12(화) 위원장과 위원들은 반월산업단지와 한우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 및 현장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 분야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함.

구 분	내 용	비 고
08:20 ~ 10:00	이동(국회→반월산업단지)	
10:00 ~ 12:00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	장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중소기업 대표 등 5인
12:30 ~ 13:00	중소업체 현장방문 - (주)신광정공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14:00 ~ 16:20	농수축산 관계자 간담회	장소: 반월농협 농수축산 관계자 7인
16:20 ~ 17:00	한우농가 현장방문 - 자연목장	경기 안산시 장상동 소재
17:05 ~	이동(한우농가→국회)	



### Ⅲ. 위원회 활동내용

#### 1. 전체회의

##### (1) 제1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18(금),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안 건	주요 논의사항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 선임 - 김낙성 위원
간사 선임의 건	○ 간사선임 - 최경환 · 전병현 위원

## (2) 제2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24(목),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현황보고
- 보고기관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지식경제부>

분야	질의요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포상제, 발명포상제 확대 방안 검토 필요</li> <li>○ 실버 복합도시 방안</li> <li>○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원인</li> <li>○ 원자재 가격상승관련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의견</li> <li>○ 관급공사부터 원자재가 납품가 연동제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li> <li>○ 대기업의 현금결제율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li> <li>○ 기업거래소 설치에 대한 견해</li> <li>○ 원자재 납품가 연동제에 대한 의견</li> <li>○ 신기술인증제도(NEP)의 실효성 여부</li> <li>○ 국방부와 협의하여 기술두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군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li> <li>○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매개단체설립에 대한 정부측 입장</li> <li>○ 벤처중소기업 활성화 방안</li> </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KO 옵션거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li> </ul>

분야	질의요지
	<p>또는 구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DI 활성화 방안</li> <li>○ 무역수지 악화 원인이 고환율때문인지 여부</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요금 인상계획</li> <li>○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인상시기, 인상 규모</li> <li>○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요금인상 억제방안의 모색 필요</li> <li>○ 에너지 공공기관의 적자는 요금인상보다는 경영합리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측 입장</li> <li>○ 공공요금 동결정책은 좀 더 빨리 실시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li> <li>○ 발전회사 통합필요성</li> <li>○ 정부의 고유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li> <li>○ 에너지절약대책으로서 서머타임제에 대한 견해</li> <li>○ 에너지 복지 확대 필요성</li> <li>○ 추경예산 편성 등 일시적인 저소득층 지원대책보다는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계획 유무</li> <li>○ 연탄보조금 지원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부분과 배치되므로, 대체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li> </ul>

분야	질의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보조금 지급방식보다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li> <li>○ 한전 등에 지원하는 1조원 상당의 예산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성장동력 주요아이템인 LED조명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li> <li>○ 도시가스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특별법(토지수용등) 제정의사</li> <li>○ 수소, 핵융합, 해양바이오 기술에 대한 정책 추진현황</li> <li>○ 중국에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li> <li>○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대책</li> <li>○ 고유가 관련 원전계획</li> <li>○ 공공부문 관용차량의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급현황</li> <li>○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관련</li> <li>○ 고유가 극복방법은 ‘에너지 의존형 산업을 축소하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제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li> <li>○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역량 제고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강화는 물론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수 있는바, 그 개발 현황</li> <li>○ 독도 메탄가스하이드레이트 상용화 기술현황</li> <li>○ 산업폐자재 이용계획</li> <li>○ 개인투자자가 주식의 39%를 보유하고 있는 가스공사에</li> </ul>

분야	질의요지
	<p>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추경예산편성 등 일시적인 방법보다 일반예산편성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li> <li>○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생안정예산은 소규모인데, 한전 등에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편성은 아닌지 여부</li> <li>○ 광진공, 석유공사 등을 타국 메이저 에너지기업과 같이 대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li> <li>○ 에너지공기업 대형화를 위한 자본 확보 방안</li> <li>○ 해외자원개발 인력양성 계획</li> <li>○ 자원민족주의에 대한 정부의 대책</li> <li>○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 중심의 자원의외교를 강화할 필요성</li> <li>○ 해외자원민간펀드 조성에 대한 의견</li> <li>○ 성공불용자 회수율</li> <li>○ 성공불용자심의위원회 구성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li> <li>○ 석유개발용자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 결정방법,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요청</li> <li>○ 북한과의 자원협력 현황</li> <li>○ 석유가격 결정구조</li> <li>○ 석유공장도가격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li> <li>○ 석유가격 관련 일시적인 에너지복지 차원 보다는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분야	질의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에 대한 우리나라의 도입방안</li> <li>○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대책</li> <li>○ 고회율정책으로 인한 원유수입 추가비용 발생 문제</li> <li>○ 석유가 인상에 따른 한전요금인상 요인</li> <li>○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R&amp;D, 투자계획 및 서비스산업 개발계획</li> <li>○ '97년 이후 정부가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li> <li>○ 도심변전소 문제에 대해 도심 녹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li> </ul>

<중소기업청>

분 야	질의 요지
<p>고유가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와 중장기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공계 인력 감소에 대응, 전자군복무제 또는 우수인력의 국책연구기관 근무를 통한 군복무 대체 등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선책을 도입할 필요</li> </ul> </li>   <li>○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 정부와 여당의 대선·총선 공약 및 인수위 국정과제로 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정책 실효성이 없는 납품단가 조정협회의무제(공정위) 및 표준약정서 활용(중기청) 제도 도입에 머무는 것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기업과 하도급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협회사 하도급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 시장 개입의 우려로 정부가 제도 도입을 꺼리는 것 같은데, 이는 시장실패의 영역으로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필요</li> <li>- 먼저 정부의 관급공사부터 동 제도를 도입할 필요</li> </ul> </li>   <li>○ 환변동보험이나 KIKO 등 환헛지 상품에 대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대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부양 정책에 따라 동 상품 가입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정부가 피해배상을 할 필요</li> </ul> </li>   <li>○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후 도입된 새로운 공공구매제도는 상위권 6.8% 중소기업이 전체 공공구매 수주액의 98%를 차지하는 등 일부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어 문제</li> </ul>
<p>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자영업자 경영개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li>   <li>○ 외국의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작은 소호 창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지난해 시행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 필요</li> </ul>

분 야	질의 요지
<p>전통시장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 중앙·지방간의 민간 자부담 확보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li> <li>○ 11월까지 유형별·특성별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데 좀 더 빨리 진행할 필요</li> </ul>
<p>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정부 출범 후 계획 대비 일자리 창출 목표가 매우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과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 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목표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활성화가 시급</li> </ul> </li> <li>○ 인력채용패키지사업 등 미취업자의 취업 연계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지원이 활성화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전국 220만에 달하는 등록장애인의 중소기업 취업 확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li> </ul> </li> </ul>
<p>규제완화 및 수요자 중심 현장 밀착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li> </ul>
<p>중소기업 정책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될 필요</li> <li>○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세제개편이 필요</li> <li>○ 벤처생태계 조성 등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li> </ul>



### (3) 제3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28(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현황보고
- 보고기관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분 야	질 의 요 지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중 합대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환급규모가 작아 민생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li> <li>- 지급기준으로서 소득 외에 복수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li> </ul> </li> <li>○ 동절기 난방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절기에 한해 실내용 등유 및 일반용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 경감할 필요</li> </ul> </li> <li>○ 유류세 10% 인하시 효과는 1조3천억원임에 반해 실제 소비자 가격에는 60%(7천억원 정도) 미만만 반영되고 나머지 40%(6천억원 정도)는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통마진 등으로 흡수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대체우회도로사업, 일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등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임.</li> <li>- 화학비료 지원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li> <li>-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추경편성은 동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성이 낮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li> <li>- 한국전력,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시장경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존재함.</li> </ul> </li> </ul>
물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부담하는 유류세와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필요</li> <li>- 물류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유류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ul>

분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사 등의 폭리의혹에 대한 국민의혹 해소 필요</li> <li>- 신·재생에너지, 해외에너지개발 등 고유가에 대한 근본 대책 강구</li> <li>- 유가, 곡물가, 원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에너지절약에의 동참을 유도해야 할 것</li> <li>○ 공공요금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경우 유가가 안정된 후에 인상할 필요</li> </ul> </li> <li>○ 환율정책에 따른 물가인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의 구두 개입 등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고물가가 초래된 측면</li> </ul> </li> <li>○ 등록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상승 및 등록금인상으로 인한 초래되는 물가상승과 서민부담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군입대의 경우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li> <li>-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등록금 후불제 도입 필요</li> </ul> </li> </ul>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상속세 인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과세구간의 세분화 및 중소기업 최저세율 인하 필요</li> <li>-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세 완화할 필요</li> </ul> </li> <li>○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한 공급측면 확대 필요</li> </ul> </li> <li>○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된 중소기업 청의 예산을 확대할 필요</li> </ul> </li> <li>○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점의 크기에 따른 카드수수료 차별을 시정할 필요</li> </ul> </li> <li>○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li> </ul>

분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말로 종료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유예기간 연장해야 함</li> <li>○ 전통시장에의 공동상품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시장에 대한 공동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경우 수수료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li> </ul> </li> </ul>
부동산 시장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부동산세 인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의 정상화 필요</li> <li>- 부동산 투기, 중부세 과세대상 비율 등 정책 효과나 목표를 고려하여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신중할 필요</li> <li>- 주택가격의 안정을 전제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 양도소득세 완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결효과의 방지를 위해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 완화필요</li> <li>-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주택이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li> <li>- 미분양아파트문제 해소를 위한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저해할 우려</li> </ul> </li> </ul>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예산 규모의 적정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혜택이 줄지 않는 수준에서의 복지 지출 효율화 방안</li> <li>- 최하위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정책 수립 계획</li> </ul> </li> <li>○ 장애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년도 장애인 예산의 증가율을 확대할 필요</li> <li>- 장애인에 대한 LPG 지원을 확대할 필요</li> <li>-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저촉되는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거부문제를 시정할 필요</li> </ul> </li> <li>○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흡한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예산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공동체에 한해서 통합급여가 아닌 개별급여 필요</li> </ul> </li> </ul>

분야	질의요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담보 소액 대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관련 사범에 대한 과징금 등을 이용하여 서민 빈곤층을 위해 도입한 무담보 소액 서민대출 확대 필요</li> <li>-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조건이 열악한 상황의 개선 필요</li> </ul> </li>   <li>○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유동성 과부하에서 비롯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경기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li> </ul> </li>   <li>○ KIKO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KO로 인한 기업의 손실에 대하여 감독당국의 실태 조사가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li> <li>- 정부당국의 외환시장개입으로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KIKO로 인한 기업의 손해 발생된 측면</li> </ul> </li>   <li>○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항을 연장 하고, 운전자 복지비용을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 과학기술의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연금 예산 확보 필요</li> <li>- GDP 대비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5%로 확대해야 함</li> <li>- R&amp;D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적용할 필요</li> </ul> </li>   <li>○ 자전거 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절약형 운송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함.</li> </ul> </li>   <li>○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방안 재검토 필요</li>   <li>○ SOC투자 등을 통해 지방의 경제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li> </ul>

#### (4) 제4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29(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현황보고
- 보고기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분 야	질 의 요 지
지방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등록세 감면제도 시행으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li> <li>○ 취·등록세를 상시 감면하여 부동산 경제 활성화 검토 필요</li> <li>○ 6억이상은 25%를 감액하고, 3억이하는 감면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임</li> <li>○ 재산세감면 과정에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더 큰 배려 필요</li> <li>○ 강남 역차별 문제, 탄력세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li> <li>○ 강북에 탄력세율을 적용 필요</li> <li>○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부세 완화에 대하여 지자체를 책임지는 장관의 의견</li> <li>○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완화는 고액자산가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초점, 종부세 인하에 대비한 재산세 인하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li> <li>○ 취·등록세 인하에 대한 견해는</li> <li>○ 재산세 인하는 '08년도의 한시적 제도인지 환원할 것인지 여부</li> <li>○ 재산세를 50만원 넘게 납부하는 극부유층은 0.8%.(12만</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p>명)에 불과한데, 6억 초과에 대하여만 25%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민생안정 대책인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부세 감면 문제에 재산세를 같이 포함해서 처리하려는 것 아닌지 여부</li> </ul>
<p>촛불집회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시위단체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자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li> <li>○ 좌파 불법세력은 끝까지 추적해주시기 바라며, 촛불시위, 소고기 파동으로 흔들리지 말고 공권력을 수호할 필요가 있음</li> <li>○ 촛불집회 불법률이 100%라면 형사처벌을 얼마나 하였으며, 집시법 이외에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왜 고발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li> <li>○ 촛불집회 진압에 사용된 시위진압도구 및 불법적인 칼날 방패와 물대포 사용에 대한 책임. 특히 방패의 끝을 시멘트바닥 등에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등 위법한 시위진압도구 사용실태 점검, 보고, 필요</li> <li>○ 무너진 공권력과 경찰 사기에 대한 방안</li> <li>○ 불법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li> <li>○ 현재 노점상 단속 등으로 하위층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공직 장애인 채용도 거의 하위직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필요</li> <li>○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견해</li> <li>○ 전경들의 구타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li> </ul>
<p>에너지 절약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 필요</li> <li>○ 자전거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등 격등제 효과분석자료가 있는지 여부</li> <li>○ 고유가를 외면하는 지자체에 대한 조치방법</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예산 절감목표가 당초 지방예산의 10%인 12조원에서 6.8조원을 축소된 이유 및 ‘절감 자원 투자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해 합리적인 자원 배분 필요.</li> <li>○ 지방의 쇠퇴기 원산지 단속반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음</li> <li>○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의 의견 청취 필요</li> <li>○ 소방공무원 인원을 늘리고 처우개선 해 줄 것</li> <li>○ 봉화마을 수해에 대한 복구 대책 필요</li> <li>○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확대가 부실대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대책마련 필요</li> <li>○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규정 완화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견해</li> <li>○ 전직 대통령 기록물 열람권 보장 및 예우 필요</li> </ul>

### (5) 제5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30(수),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현황보고
- 보고기관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분 야	질 의 요 지
부동산 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기조</li> <li>○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불안정한 이유</li> <li>○ 정부정책이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여부</li> <li>○ 분양가 상한제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li> <li>○ 영구임대 관리비가 더 비싼 원인</li> <li>○ 미분양 문제는 업계의 자구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li> <li>○ 재건축·재개발 관련 투명성 제고 필요</li> <li>○ 조합장 등 재산등록 필요</li> <li>○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2조 200억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활용방안 모색 필요</li> <li>○ 시/군 의원까지 자료 열람권 인정 용의 여부</li> <li>○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 아닌지 여부</li> <li>○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li> <li>○ 국가에서 기반시설 등 일정부분 지원 용의</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주택거래 취득세, 등록세 감면 검토 용의</li> <li>○ 부동산 중개 관련 간소화 필요</li> <li>○ 뉴타운 관련 원주민 정착률이 낮고 세입자 대책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li> <li>○ 건교부에서 '07년도 내에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합해 6000세대를 이전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이전한 가수는 436가구에 불과하므로, 목표치의 충실한 이행 필요</li> <li>○ 뉴타운 철거민 이주권 보호대책</li> <li>○ 임대주택 관리비(연료비, 수선, 개보수) 지원 용의 (국비투입)</li> <li>○ 향후 주택정책방향</li> <li>○ 지역간 주택시장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해</li> <li>○ 취득세/등록세 인하로 지방세수 결손으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질수 있음을 감안 필요</li> <li>○ 영구임대주택 건설 장기간 소요</li> <li>○ 극빈자에 대한 지원 대책(정책개발) 필요</li> <li>○ 각종 규제 개선 계획</li> <li>○ 분양가 상한제 제도 폐지 용의</li> <li>○ 중복검사, 각종 위원회 심의 폐지 필요</li> <li>○ 임대주택 임대료 재정지원 용의</li> <li>○ 양도세 정상화 용의</li> <li>○ 부동산 시장 안정시점에 대한 전망</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 등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마련 필요</li> <li>○ 주택공사가 지은 아파트의 정화조 문제 등 A/S를 철저히 관리 필요</li> </ul>
<p>건설투자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률이 낮은 사업이 추경에 포함된 이유</li> <li>○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li> <li>○ Soc 투자확대 재원</li> <li>○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우려</li> <li>○ 하도급 제도 개선 필요</li> </ul>
<p>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 및 운송업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차 구매로 과잉공급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li> <li>○ 표준운임제, 다단계운송구조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li> <li>○ 환급금 지급기준 1,800원 하향조정계획 있는지 여부</li> <li>○ 택시가 환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li> <li>○ LNG 전환 지원의 실효성 의문</li> <li>○ 화물연대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감차 재원</li> <li>○ 신규진입 억제 필요</li> <li>○ 표준운임제 도입방안</li> <li>○ 화물사업자 전용 휴게소 확대, 24시간 통행료 감면 용의 여부</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p>대중교통 활성화 (철도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동권 보장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형 리프트로 교체 촉구</li> <li>- 하이패스 차로 이용대책</li> </ul> </li>   <li>○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할인혜택 관련 출퇴근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li>   <li>○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건 개선 필요(20km 기준 등)</li>   <li>○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도시철도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지원비율을 높일 용의가 있는지 여부</li>   <li>○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용의</li>   <li>○ 신안산선에 대림삼거리역 신설 용의</li>   <li>○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택시운행 허용 용의</li>   <li>○ 동남부 지역만 지하철이 없는데, 관련 대책이 필요</li>   <li>○ 지하철 9호선 등 연결 용의</li>   <li>○ 저상버스 정부지원 확대 용의</li>   <li>○ 철도공사 부채 해소 방안</li>   <li>○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포함하는 등 지원 대책</li>   <li>○ 공급 과잉문제 해소방안</li>   <li>○ 택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 필요</li> </ul>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지방해경청 입지 변경 사유 및 장관의 견해</li>   <li>○ 남해지방해경청 관련, 국가예산절감, 주위환경, 미래경</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p>쟁력 등 고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수해방지대책 미흡했던 것 아닌지 여부</li> <li>○ 독도 의용수비대 재평가 작업 필요</li> <li>○ 미 지명위원회 관련 사태 재발방지 대책</li> <li>○ 대운하 추진 여부</li> <li>○ 행복도시 예산을 당초대로 편성할 것인지 여부</li> <li>○ 광역도로비용은 토공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여부</li> <li>○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li> <li>○ 부산 헌병부대 이전부지에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재검토 용의</li> <li>○ 실용적 사고에 입각한 전략적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필요 (부산 도심지내 철도시설 외곽이전 등)</li> <li>○ 실효성 있는 공공기관 이전방안 마련 필요</li> <li>○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의 지난 5년간 각각 1672억, 1,338억원 성과급 잔치 관련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대책 요망</li> <li>○ 주공, 토공 통합에 따른 지연문제에 대한 대책</li> <li>○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수단 마련 필요</li> <li>○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시 수행하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임</li> </ul>

## (6) 제6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7. 31(목),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현황보고
- 보고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 <교육과학기술부>

분 야	질 의 요 지
대학생등록금 및 학자금대출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대출제도 이율인하 등 지속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적 접근이 아닌 복지적 접근 필요</li> <li>- 등록금 사전 예고제 필요</li> <li>- 대학의 적립금관리 부실에 대한 고민</li> <li>- 국가장학재단에 금융업무 포함 재검토</li> <li>- 국가장학금 수혜율 지속 확대 필요</li> <li>- 소득연계(후불)형 학자금대출 도입 검토</li> <li>- 대학자율화로 인한 등록금인상 우려</li> <li>- 기여금입학제도 도입 검토</li> </ul> </li> <li>○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 이행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li> <li>○ 학자금대출을 받고 군예간 학생에 대한 이자유예 요청</li> </ul>
교육복지투자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제도개선과 빈곤아동청소년에 적합한 통합복지적 접근 필요</li> <li>○ 방과후 페스티벌 사업비의 과다지출 개선 및 사업축소</li> <li>○ 교육복지투자사업 지속 추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문구 삽입 요청 및 129억 예산 회복</li> </ul> </li> <li>○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시 지역별 상황 고려하여 추진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도 교육과정 포함 검토</li> <li>- 장애인지원정책 시도 100% 이전 자제</li> <li>-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필요</li> </ul> </li> <li>○ 일반학교 통합학급교사와 담당 장학사의 특수교육연수 미이수 문제</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새터민가정 지원 확대 요청</li> </ul>
사교육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의 수강료 고시기준보다 추가 징수에 대한 조치기준 마련 검토</li> <li>○ 사교육비는 60-70년대 보다 증가했음에도 교육경쟁력은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교육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li> </ul> </li> <li>○ 공교육강화가 필요하며, 영어교육 사교육비중(34%)이 높음으로 주한미군 가족 활용 검토</li> </ul>
교육감직선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에 따른 기호부여, 투표율 제고 필요,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li> <li>-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화 방향에 대한 견해</li> </ul> </li> </ul>
급식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식아동의 복지부와 급식 이원화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식아동에 대한 국가적 해결이 필요</li> <li>- 우선적으로 교과부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요청</li> </ul> </li> </ul>
학교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평준화에 대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리 학교배정 요청</li> <li>-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li> </ul> </li> <li>○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li> <li>○ 특별교부금의 투명집행 및 사용내역 공개 요청</li> <li>○ 교원처우 개선 및 교권 확립 필요</li> <li>○ 교원평가제 추진 요청</li> </ul>
과학기술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크노닥터 효율적 지원 및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운용 예산 확대</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 영재 등 전국민 대상 과학적 사고에 기반한 인간양성 교육에 대한 자료요청</li> <li>○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인재 양성, 첨단 미래 기술 집약을 위한 우수두뇌인력 양성 등 노력 등에 대한 자료 요청</li> </ul>

<농림수산식품부>

분 야	질의 요지
<p>농어가 경영안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류가 인상 농가피해 심각한데, 단기대책 중 재정에서 투입하려는 재원 규모는?</li> <li>○ 자연재해보다 더 어려움이 큰데, 재해에 버금가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은?</li> <li>○ 일본의 사료안전기금 비축제도를 도입할 의향은?</li> <li>○ 농수축산물 유통 구조 때문에 고가의 가격으로 소비되는 것인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은? 왜 이행 안되는지?</li> <li>○ 농업분야 정부 지원 미흡. 한나라당 감세 정책이 농업분야 효과가 있는지?</li> <li>○ 용자 등 농어가 지원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많은데 그 이유는?</li> <li>○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가 고충이 큰데, MB 물가지수 중 농수산물은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올랐나?</li> <li>○ 부동산 관련 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것. 농어민에 대한 지원 늘리는 방안은?</li> <li>○ 추경이 제대로 안될 경우 농어업인 피해 규모는?</li> <li>○ 현재 농어가 유가 환급금이 미흡하지 않은가? 실제로 다 쓰지 못할 것 같은데 123원/ℓ씩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li> <li>○ 사료·곡물가 폭등 관련,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제도’에서 75%가 등록 안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지?</li> <li>○ 축산발전기금을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할 용의는?</li> <li>○ 채낚기 어선 집어 등을 LED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li> </ul>



분 야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료구매자금 저리로 하는 것은 농가부채만 가중 시킬 우려 있음. 이를 피할 방법은?</li> <li>○ 한우가격 17% 하락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가격은 동일한 상황인데 해결방안은?</li> <li>○ 면세류 부정수급 횡수, 방지 대책은?</li> <li>○ 사료값 폭등에 따른 축산농가 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정책의 문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장치 마련, 사료안정기금 조성, 해외 사료자원 개발 추진 필요성 제안.</li> </ul> </li> <li>○ 사료값 상승에 대한 완충장치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li> <li>○ 사료가격 안전기금 조성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은?</li> <li>○ 어선 감척사업 시행 상 문제점은?</li> <li>○ 채낚기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 요구에 대한 견해는?</li> <li>○ 어업용 유류에 대한 추가 면세 견해는?</li> <li>○ 비료 사재기 현황은?</li> <li>○ 맞춤형 비료사업에 대한 견해는?</li> <li>○ 사료구매권 폐지 비롯한 제도 개선 방안은?</li> <li>○ 봉화지역, 낙엽송 수종 문제 등 수해방지 위한 대책은 있는가?</li> <li>○ 비료 인상분은 정부에서 30%, 농협 30%, 비료회사 10%, 농민30% 부담하는데, 농협이 농민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에 대한 견해는?</li> <li>○ 1월달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도 농민 부담 덜어 주어야 하지 않나?</li> </ul>

분 야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분의 퇴비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축분살포기가 축산 농가에만 배포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li> <li>○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도입으로 현금이 없으면 면세유 구입할 수 없는 상황 발생했는데 개선방안은?</li> <li>○ 축산업 발전대책,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방안 추진 현황은?</li> <li>○ 암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행중인가?</li> <li>○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부에 면세유 증대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지?</li> </ul>
<p>식량안보 및 식품안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농업개발 등 식량안보 대책은?</li> <li>○ 식량 바이오테크놀리지가 중요한데, 기술개발, 인력육성 등 종자주권 관련 대책은?</li> <li>○ 곡물자급율이 낮는데, 식량무기화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농업용지 축소 계획은 문제 아닌지?</li> <li>○ 식량자급 목표율 상향 조정할 의향은?</li> <li>○ 국민 먹거리 관련 R&amp;D, 식품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준비 상황은?</li> <li>○ 미래 농수산 분야 소득증대 위한 기술보급 방안은?</li> <li>○ AI 발생 등 문제 많음. 전문병원 설치 등 대응방안은?</li> <li>○ 다이옥신 돼지고기 시중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사전 검역체계 강화</li> <li>○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액이 6,324억 원 추정, 연중 상시방역체계 구축</li> <li>○ 도축장 위생문제 많은데 개선방안은?</li> </ul>

분 야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약재 둔갑 판매 어떻게 할지?</li> <li>○ GMO 표시제도 확대 필요성</li> </ul>
미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D수첩 보도가 미 연방 대법원의 현실적 악의론에 비추어 볼 때 왜 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인가?</li> <li>○ 이번 고소는 헌법 제21조 언론자유 침해임. 당장 고소를 취하해야 하지 않는가?</li> <li>○ 촛불 파동으로 농어민 추가 피해 없나?</li> <li>○ 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국민·농어민에게 미친 영향은?</li> <li>○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위해 16억원 포함 총 50억원 사용하였는데 한우 홍보에는 6억원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 아닌지?</li> <li>○ 미국산 쇠고기 협상 인식 문제 있는 것 아닌지?</li> <li>○ 추가협상은 원래 협상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인데 쇠고기 협상 잘 되었다고 보나?</li> <li>○ 쇠고기 원산지표시만 강화되면 한우 경쟁력 있는지?</li> </ul>
허베이 스피리트호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액 차액 보상 규모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li> <li>○ 태안지역 아이들의 심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추진 의향은?</li> </ul>
농어촌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학교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li> <li>○ 도시에서 귀농한 빈민을 위한 지원하는 특별한 사업을 마이크로 크레딧과 연계하는 방안은?</li> </ul>

분 야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만명 정도의 노손 가구에 대한 대책은?</li> <li>○ 농촌결혼여성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빈약하지 않는가?</li> <li>○ 농산어촌 사회복지안전망을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지?</li> </ul>
기타 농정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 들어 농정기조에 변화가 있는가?</li> <li>○ 유통구조를 현대화 할 계획은?</li> <li>○ 계획성 없는 농정 문제 극복하고, 신뢰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li> <li>○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 방안은?</li> <li>○ 산업용 곡물이 수입되는 중인데 병과조합 등 실수요자 단체에 수입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li> <li>○ 유통구조를 현대화 할 계획은?</li> <li>○ DDA 합의 도달 실패, FTA 대두 상황. FTA 적극 추진되는 경우 농식품부 대응 방안은?</li> </ul>

## (7) 제7차 전체회의

- 일시 및 장소 : 2008. 8. 11(월), 산업자원위원회 회의실(534호)
- 안건 : 민생관련 종합정책질의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 <기획재정부>

분 야	질 의 요 지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 서민과 중소기업이 타격이 큼 → 물가를 위해 금리정책을 활용할 것인가?</li> <li>○ 기금징수와 사용이 주먹구구식 →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예산정책처 자료) → 적정 여유자금이 있는 건 좋으나 국민에게 부담되는 것 아닌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람</li> <li>○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물가의 책임론</li> <li>○ 물가정책의 주무부처이므로 유가도 지경부와 같이 원만한 협의 요망</li> <li>○ 최근의 물가상승 관련하여 한은의 금리인상승정책에 대해 견해는?</li> <li>○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li> <li>○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기 급속히 하강하고 있고, 물가불안도 심각한바,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완화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검토 필요성</li> <li>○ 일자리 창출은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오히려 실업급여자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li> <li>○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3%→1%)</li> </ul>

분야	질의요지
	<p>효과, MB물가지수 관리는 오히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민층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으로 부가가치세 5% 인하 전향적 검토 필요</li> <li>○ 국제 원자재가격 인하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가격에 대한 대책</li> <li>○ '9월 위기설'에 대한 정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유동성 위기설, 건설사 경영악화와 PF 부실 우려로 인해 한국경제 위기설 대두에 대한 대책</li> </ul> </li> </ul>
고유가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장비부문은 유가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혜택이 발주자에게 돌아가서 그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난번 질의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장비부분도 있는데, 예컨대 레미콘의 경우가 그런데 이번 추계예산심의시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는가?</li> <li>○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과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전기요금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싸기 때문이라는 장관의 답변에 대한 근거는?</li> <li>○ 유가변동이 상승시는 급, 하락시는 완만하게 되는 원인과 대책은?</li> <li>○ 추경의 목적이 SOC 사업등 내수진작용이 아닌지?</li> </ul>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발의 법률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법안은?</li> <li>○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투입(6천억) → 투입효과는?</li> <li>○ 중소기업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은?</li> </ul>
부동산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25만호 이상일것, 추가적인 미분</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안정	<p>양 및 건설분야 대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분양 아파트 원인은 과잉공급과 주변시세보다 높은 가격 때문</li> </ul>
복지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층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 계획을 정리하여 제출하기 바람</li> <li>○ 08년 장애인 예산 6,730억, 기획재정부에서 5,918억만 책정?</li> <li>○ 복지예산 중 아동복지 예산 비율은? 0.6%이고, 전체예산 중 0.05% 정도 → 빈곤 아동 청소년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li> <li>○ 유류세 인하하여 원유가를 낮춰야 함, 높은 부가가치세율(10%)이 고물가의 원인 → 유류세 및 부가가치세를 낮춰야 하며, 복지예산을 늘려야 함.</li> <li>○ 상위 20%에 세금을 깎아 주지 말고, 이를 하위 20%에 대해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li> <li>○ 장애인 복지예산이 부족(08년 예산 6,730억 → 5,918억),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국회연설에서 서민, 장애인의 민생문제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한 것과 반하는 것 아닌가?</li> <li>○ 장애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요구</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정부가 과학기술, 미래성장 산업의 육성 등 심각성, 통찰력이 있는지</li> <li>○ 과학기술 예산 증액과 관련부처 정례회의를 재임 중 약속필요</li> <li>○ 지역균형 개발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li> <li>○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편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나?</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래 북부권의 경우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수산물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가?</li> <li>○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하여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대한 지원하는 특별법을 검토해 주시 바람</li> <li>○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용의는?</li> <li>○ 공업용지 총량제 때문에 지역발전을 막고 있는 것은 실용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li> <li>○ 수도권 공업용지 총량제를 폐지할 의사는 없나?</li> <li>○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문제</li> <li>○ 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은?</li> <li>○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율 증대 발표(국민연금 이사장) 전에 정부와 사전교감 있었나?</li> <li>○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율이 옳다고 보는지, 손실보전 방안은?</li> <li>○ 상품권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 의향은?</li> <li>○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관련 설명</li> <li>○ 중산층 강화 차원의 정부대책은?</li> <li>○ 일자리 지원 사업의 총괄 부처는?</li> <li>○ 중국경제 하강에 대한 영향 및 대책</li> <li>○ 지난 7월 한달새 외환보유고 줄어듬. 외환보유고는 문제 없는가? 2100억 달러만 넘으면 적절하다고 한 것에 대한 견해</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철 7호선 부천연장구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하지 않나?</li> <li>○ 하나은행 1조7천억 과세 철회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권무세 · 무권유세, 국세행정의 신뢰 훼손, 개선방안</li> </ul> </li> </ul>

<지식경제부>

분 야	질 의 요 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분야 육성도 중요하지만 한·양의학도 중요</li> <li>○ 실용정부 표방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기업협력지원관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과 업무 중복, 국무회의에서 문제제기 필요</li> <li>○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특화전략 필요</li> <li>○ R&amp;D예산을 GDP대비 5% 투자하겠다는 정부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 및 차질없는 추진 필요</li> <li>○ 월제어 리프트에 대한 사고조사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가?</li> </ul>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림픽 후 중국경제의 급락 전망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li> <li>○ 베이징올림픽의 국내효과에 대한 의견은?</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폐장의 설립위치와 후속조치는?</li> <li>○ 유리화시설에 대한 관련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li> <li>○ 풍력발전소에 대한 정부지원책은?</li> <li>○ 유가보조금에 대한 근거가 있는가?</li> <li>○ 기업에 보조금을 법으로 주는게 옳은가?</li> <li>○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책은?</li> <li>○ 에너지원단위 개선계획의 결과는?</li> <li>○ 원자력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li> <li>○ 원전 발전소 설립 시 약속 이행여부는?</li> <li>○ 현재 국가경제에 대한 생각과 추경예산의 상황은?</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유사 원가공개에 대한 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경제부 고시에 석유공사에서 가격을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li> </ul> </li> <li>○ 정유사간 가격단합에 대한 의견은?</li> <li>○ 정유사별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통해 정유사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필요</li> </ul> </li> <li>○ 석유공급가격공개가 소비자에게 이익인가?</li> <li>○ 싱가포르공급유가와 우리나라 공급유가의 비교표에 대한 자료를 제출</li> <li>○ 유가의 오름세는 강하고 내림세는 약한데, 이에 대한 견해</li> <li>○ 유가와 관련하여 정유사측에 유리한 자료만 보고 있지 않은가?</li> <li>○ 석유사업법 개정안 내용은?</li> <li>○ 경유제품의 경우 국제유가상승률 보다 국내유가상승률이 더 높은 원인.</li> <li>○ 민간업체의 가스직도입에 대한 가스공사의 도움은 세금 낭비가 아닌가?</li> <li>○ LNG 직도입 문제의 모순</li> <li>○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li> <li>○ 석유의존도를 줄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전지 육성에 대한 의견은?</li> </ul> </li> <li>○ 유전개발사업이 많은 예산에도 성과가 미비한 이유</li> <li>○ 독도 부근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의 진행상황은?</li> </ul>

분 야	질 의 요 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래시장 활성화 홍보기간이 8월 중순(휴가철+올림픽)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li> <li>○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책은?</li> <li>○ 공공구매제도가 몇몇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음.</li> <li>○ 납품단가연동제, 사업조정제도 개선(폐지 또는 5년 연장),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li> <li>○ 납품가 연동제에 대한 국가개입은 시장경제를 저해할 위험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단체를 설립하여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은?</li> </ul> </li> <li>○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은?</li> <li>○ 분리발주제에 대한 예외규정은 어디에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사업조정제도는 왜 활용 안하나?</li> </ul> </li> <li>○ 기술유출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대책은?</li> </ul>

## 2. 간담회 및 현장활동

### (1) 중소기업분야 간담회 및 현장활동

- 일 시 : 2008. 8. 12(화), 10:00 ~ 13:00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회의실
- 참석자(5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기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주대철, 광진화학 대표이사 강경희, 두원전선 대표이사 김상복, 한국몰렉스 회장 정진택
- 정부 및 유관기관 배석자(3인)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김영학,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정영태,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박봉규

※ 간담회 종료 후 경기 안산시 소재 신광정공 방문

#### 【간담회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분 야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은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원가부담과 내수부진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불투명한 미래 경기전망이 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켜 미래 성장잠재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li> <li>○ 시중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400조원인데,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하반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축소가 예상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원 중 7월말현재 85%가 소진되고 있어 하반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 전망되므로 정책자금에 대한 확대가 요망됨.</li> <li>○ 반월·시화공단의 중소기업의 50%이상이 경영위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이 0.2%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어음이용이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 경영상태와는 거리가 있음.</li> <li>○ 반월·시화 공단지역에 대한 기업은행의 대출이 6조에 이르는데,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등 융통성 있게 부</li> </ul>

분 야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p>실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DF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으로 신·기보와 KDF, 중진공간의 업무중복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향후 구체화과정에서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진공과 신·기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li> <li>○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하는 신보와 기보에서 동일한 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중복보증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실제로 현재 중복보증은 2.1%에 불과하고 신·기보의 통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가 반대하고 있음. 보증기관이 하나의 기관이 되면 독점적 우월성으로 인해 보증규모의 축소가 우려됨.</li> <li>○ 기보, 신보, 중진공, KDF 등 정책금융기관의 문제도 혼란스러운 상황임. 따라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 기·신보의 통합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임.</li> </ul>
중소기업 인력수급 관련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는 최저임금보장, 4대 보험에 관한 현행법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선 필요</li> <li>○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차별하여 처우하는 문제는 ILO 규정에 반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문제는 검토 필요</li> <li>○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많은 제안을 했으나 노동계와의 알력 등으로 쉽지 않은 사항임. 따라서, 지자체별로 경제환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li> <li>○ 시화안산 지역에 5개의 대학이 있으나, 대학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수요조사 없이 공급을 하고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li> <li>○ 교육과 산업현장과의 미스 매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대학, 협회, 단체 등의 경우 기업과 연계하여 학과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음.</li> </ul>

분 야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근원적인 변경이 필요함. 특히 여성인력을 산업현장으로 유인하여 인력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li> <li>○ 일일고용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인력사업소 등의幌포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직업소개소, 인력사무소 등의 실태를 파악해야 함</li> <li>○ 빈곤아동과 중소기업이 멘토링 관계를 통해 빈곤아동의 경제적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li> </ul>
수도권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월, 시화산업단지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확장이 어려우므로 다른 지역에서 증설하는 경우가 많음. 반월, 시화산업단지의 장점은 인력수급이 비교적 원활하다는 점인데 이러한 이점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함.</li> <li>○ 대기업의 입주제한으로 폐업·이전기업의 공장 매각 용지가 큰 필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li> <li>○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대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동일지역내에서 증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획일적 규제는 사업포기,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획일적 규제를 철폐할 필요</li> </ul>
사회기반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산역 또는 정왕역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li> <li>○ 서안산IC에 하이패스 게이트를 증설하여 톨게이트 정체문제를 해소해 시간적·금전적 낭비를 없애 줄 것을 요망</li> <li>○ 서안산 IC문제는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해결할 예정임.</li> </ul>

## (2) 농·수·축산분야 간담회 및 현장활동

- 일 시 : 2008. 8. 12(화), 14:00 ~ 16:20
- 장 소 : 반월농협(경기 안산시) 대회의실
- 참석자(7인) :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김경진, 화성조암농협 조합장 김익규, 화성난수출단지 대표 박창만, 안양축협 조합장 권우택, 한우농가 대표 김동수, 경인북부수협 조합장 이경식, 경인북부수협 조합원 임명수
- 정부 및 유관기관 배석자(3인)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임광수, 수협중앙회 지도관 리상임이사 염기영

※ 간담회 종료 후 경기 안산시 소재 한우농가(자연목장) 방문

### 【간담회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분 야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유류가격 상승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가연동 보조금의 경유가 기준가격(1,800/ℓ) 인하</li> <li>○ 농어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2%) 면제 필요</li> <li>○ 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원유 관세(1%) 및 석유수입부과금(리터당 16원) 면제 등 세제지원</li> <li>○ 면세유 공급대상자 확대(농협중앙회)</li> <li>○ 유가완충 준비금('08년 현재 6,600억원)의 집행을 통한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 인하</li> </ul>
사료가격 상승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축농가의 불안해소 및 부담감소 등을 위해 축산물발전기금 일부와 정부·사료업체의 출연금 및 축산물 수입관세(목적세 전환) 등을 재원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필요</li> </ul>



분 야	주요내용 및 건의사항
비료가격 상승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세계적 비료 부족과 중국의 비료 수출세 100% 부과로 국제 원료가격이 폭등하여 국내 비료가격이 금년 1월 24%, 6월 63%가 인상되었는바,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05년 폐지된 비료차손제도 부활 필요</li> </ul>
기타 농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2008년말로 종료되는바, 감면시한 연장(영세율 영구화) 및 농기계은행에서 취득하는 농기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적극 검토</li> <li>○ 환경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 근교 축산업 지원 또는 특정지역을 축산진흥지구로 지정·공동사육을 통한 생산·유통체계 개선</li> <li>○ 연근해 어업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연료비 비중이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사업 확대 및 감척비용 현실화</li> <li>○ 영어자금 금리인하(현행 3%→1%), 어선 및 어선원보험료 국고보조 지원 확대(현행 14~62%→30~80%)</li> <li>○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사업 지원(현재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 중)</li> <li>○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권 부여 또는 한우농가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방안 적극 검토</li> <li>○ 비료가격 및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생태농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li> </ul>

### 3. 특기사항 - 유가청문회 개최 관련

-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유제품가격의 적정성 및 원가, 정유사의 폭리 관련 입장 설명, 식유유통구조와 거래 관행에 대한 확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적절한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유회사 대표 등을 출석대상으로 한 “유가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고유가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점검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기업이나 업체를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회가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으며, 민주당의 요구사항은 정상적인 특위활동이나 “유가공청회”로 충분하다고 보아 청문회의 개최에는 반대함에 따라 “유가청문회”는 실시되지 아니하였음.

## IV.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제언

### 1.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안정대책

#### (1) 공공요금 안정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 공공요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품이므로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 \*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료 인상이 지하철, 시내버스 등 교통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물가는 0.2%p 이상 증가
  - 공공요금 인상이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을 높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확산시킬 우려
- 관련 공기업의 비용절감 노력 부족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요금 관련 일부 공기업의 경우 부당한 인건비 지출, 자회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외연확장 등 부실·방만경영의 문제가 지속
    - \*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자회사에 비업무용 토지를 저가 매각하여 자회사에 특혜를 부여하고 퇴직금을 과다지급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주식의 구입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 □ 정책과제

-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점진적인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최대한 완화할 필요

○ 공공요금 관련 공기업의 경영개선

- 인력전문성 강화, 경영 공시대상 확대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
- 공공기관 임금 수준과 실제 노동생산성의 연계여부 등을 경영 평가 과정에서 점검하고, 과도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부실·방만경영을 초래하였거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내부감사시스템과 외부감사시스템의 연계 강화

## (2) 유가환급금 지급 등 중산서민층의 부담 경감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유가상승으로 인해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국제유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 및 실질 국민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중산서민층에 속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의 유류구입비용 증가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 정책과제

- 유가환급금 지급제도 도입
  - 고유가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중산서민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유류구입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유가환급금 제도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
  - 중산서민층의 생계용 차량인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제도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에 대한 면세 검토
  - 장애인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차량용 LPG연료에 대한 면세방안 검토 필요

### (3) 시중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확보

#### □ 현황 및 문제점

- 시중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의 증가가 지속됨으로써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
    - \* 가계대출 현황(말잔대비 증감액): 2.4조('07년 1/4)→2.3조('07년 2/4)→6.1조('07년 3/4)→6.9조('07년 4/4)→4.0조('08년 1/4)
    - \* 기업대출 현황(말잔대비 증감액): 14.3조('07년 1/4)→25.8조('07년 2/4)→18.2조('07년 3/4)→15.2조('07년 4/4)→22.4조('08년 1/4)
    - \* M2(평균잔액 증가율): 11.5%('07년 1/4)→11.0%('07년 2/4)→11.1%('07년 3/4)→11.2%('07년 4/4)→13.3%('08년 1/4)

#### □ 정책과제

-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
  -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 강화
- 기업대출의 건전성 제고
  - 대기업의 경우 과도한 M&A 대출을 억제할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운 자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신용정보·리스크관리 등을 통한 건전성 제고
- 금융회사간 대출 경쟁 심화 방지
  - 금융회사간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하여 관계당국의 수익성·건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4)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 창출의 주된 동인인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 중국의 국내외 시장침투 확대, 새로운 수익모델 부족,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위험회피 성향 등으로 투자 증가율이 둔화

	<u>2002</u>	<u>2003</u>	<u>2004</u>	<u>2005</u>
- 설비투자(국민계정)	7.5	△1.2	3.8	5.1
· 대기업(상장기업)	△8.3	32.2	23.4	18.9
· 중소기업(비상장기업)	19.4	△20.5	△15.0	△14.3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 과도한 규제수준은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 중소기업 투자시 고려사항(KDI, 06.6) : 규제문제(67%), 생산인력확보(69.9%)
  - 중소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 및 보수조건으로 인한 인력수급에 차질 발생

##### □ 정책과제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원자재 수급 지원
  -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제공, 취업비자 지원 등 해외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치 지원
  -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고용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및 인력 채용을 지원
- 조달청 공동구매 대상 품목 확대 및 원자재 구매 정책 자금 지원 강화
-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확대방안 검토

####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인하하고 R&D투자 유도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연납, 이연 등 특례제도 보완
- 납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세제지원을 하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및 지원체계 재점검

- 중소기업의 기업형태, 영업영역,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익모델 관점에서 현행 규제 및 지원체계 점검
- 생산요소의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 창업투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기반 확대



## (5) 저소득층의 주거비 및 통신비 부담 완화

### □ 현황 및 문제점

- 주거비·통신비로 인한 생계부담 증가
  - 최저생계비에 포함되는 주거비·통신비의 상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문화적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 위협
  - \*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 계층(소득수준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87만원) 중 교통통신비(18만원) 및 주거비(6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27.6%임.

### □ 정책과제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확대 및 저리대출 지원
  -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병행하여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 도입
- 통신요금 인하 유도
  - 이동전화요금 감면제도의 대상 및 혜택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요금인하 유도

## 2. 고유가 대책

### (1)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 또는 동결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상반기에 석유, 유연탄, LNG 등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 연료비용이 상승
  - 유연탄·LNG·유류 등 발전연료비가 08년 상반기에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
  - 도시가스원료비는 상반기중 약 24.4% 증가
-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용증가 발생
-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생활 및 중소기업 어려움 가중

#### □ 정책과제

- 하반기 중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더라도,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10%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 필요
-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20% 할인, 심야전력요금 20% 할인제도 시행

대상	할인 전력	할인률
장애인	주택용 전력	20%
유공상이자	주택용 전력	20%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전력·심야전력	20%
독립유공자	주택용 전력	20%
사회복지시설	주택용 전력·심야전력	20%
차상위계층	심야전력	18%

-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 최소화

## (2)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유가 결정방식 재검토

### □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유사는 비용기준 가격책정 방식을 사용했으나, 국내제품가가 국제제품가에 비해 높아진 것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문제제기로, '01년 중반이후 국내가격 산정방식을 국제 제품가 연동방식으로 변경
  - \* 비용기준 가격결정 : 원유 등 원가에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가격 결정
  - \* 가치기준 가격책정 : 원가보다는 제품 성질이나 소비자 성향, 경쟁관계 등 시장환경(국제제품가)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
  - \* 미국·EU·호주 등 대부분의 유가자유화 국가에서는 국제 시장 가격기준 결정방식 채택, 일본도 현재의 비용기준 방식에서 국제가격 연동방식으로 변경을 검토중
- 국제제품가 기준 가격결정방식은 제품별 가격형평성 논란 및 정유사의 과다이익 비판이 있음

### □ 정책과제

- 석유시장 유통구조개선작업 지속 추진
  - 석유수출입 등록요건 완화, 동종 판매업간 제품거래 허용(석대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석유시장 유통구조개선작업의 지속적 추진
- 가격결정구조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개별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 보고 의무화 검토

### (3) 저소득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복지정책 및 도시가스공급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침체와 소득양극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사회적 빈곤층이 계속 증가
-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비용 감소를 위해 고효율 조명기기보급, 단열사업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시급히 요망
- '83년부터 천연가스공급 주배관망건설 사업이 추진된 이래 대부분의 도시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나, 인구저밀도지역이나 주배관망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 □ 정책과제

-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할인(20%), 연탄쿠폰지원 등을 통해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에너지이용 보장
- 난방시설효율개선,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는 효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 \* 난방시설효율 개선 : 추경을 통해 135억원 증액 추진  
('08 본예산 150억원)
  - \* 고효율조명기기교체 : 추경을 통해 135억원 증액 추진  
( '08 본예산 190억원)
- 지역균형 발전 및 에너지복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방안 적극 검토

-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이 공급 소외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 동 사업의 08년 예산 250억중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재래시장을 포함한 공급소외지역 등에 배정 검토

#### (4) 해외자원개발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해외자원개발 현황
  - 2007년말 현재, 53개국에서 286개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중
    - \* 32억불 투자하여 석유·가스 168억불의 매장량 확보
-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나,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4.2% 불과
  - 2012년까지 18.1%, 2030년까지 30%의 자주개발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달성가능성은 미지수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의 국가처럼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민족주의 준동 가능성은 항시 존재
  -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력과 자본력은 부족

##### □ 정책과제

-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목표(18.1%)의 차질없는 달성 추진
  - 기존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기 확보한 탐사·개발 광구가 성공적으로 생산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
  - 유망 생산광구 매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주개발 물량 확보 필요
- 해외자원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충, 전문인력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 기초 역량을 강화

○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강구

- 석유공사가 국제시장에서 석유개발 기관으로는 너무 영세
- 석유공사의 1일 생산량을 5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대형화 방안 강구

○ 해외자원개발펀드 조성

-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민간 자금 확충으로 유전개발펀드 2000 억원, 니켈개발펀드 1400억 원 등을 기 조성한 바 있으나,
- 향후 공기업도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자원개발펀드 조성 요망

## (5)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07년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총 1차 에너지 대비 2.39%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보급률 부진은 당초 의욕적인 목표설정, 보급효율성이 낮은 태양광 위주 보급, 투자예산 부족 등에 기인
    - \* 보급률(%) : ('03)2.06 → ('04)2.08 → ('05)2.13 → ('06)2.24 → ('07)2.39
  - 선진국의 경우, 바이오에탄올을 10% 혼합한 E10의 보급 시작, 2030년까지 모든 휘발유에 E10사용을 의무화

#### < 주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율 >

구 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덴마크
공급비중(%)	2.4	4.4	4.6	3.0	1.6	5.7	15.1

\* 한국은 '07년, 외국은 '05년(자료 : IEA) 실적임

- 에너지안보 차원의 대체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하여 바이오에탄올 등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가 필요
- 바이오에탄올 도입 이전에 품질특성규명 및 제조·운반·유통 등에 대한 실증평가연구 실시('06.8~'08.7)
  - \* 주유기, 저장탱크, 운반트럭, 파이프라인 등의 부식여부, 수분혼입 등 연구



## □ 정책과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최근 고유가지속 및 기후변화협약 등 신재생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보급목표 조정, 추진전략 등을 반영한 정책방향 수립 필요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화 추진 필요
  -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정책 추진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 \* 기술수준(선진국 대비):태양광70~80%, 풍력40~70%, 수소연료전지50~60%
  - \* 태양광 : Value Chain별 핵심기술 개발 및 저가화·효율화 추진
  - \* 풍력 : 시장잠재력이 큰 3~5MW급 해상용풍력 및 5MW이상 차세대풍력 개발
  - \* 수소연료전지 : 핵심 기술·부품 국산화와 산업화 기반 조성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 집중양성방안 강구

### 3. 중소기업 지원대책

#### (1)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 확보

##### □ 현황 및 문제점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경과
  - 중소기업계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08.1월)
  - 중소기업청은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제시('08.5월)
  - 공정위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 조정제도 반영안 발표('08.6월)
-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인식차
  -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도입
    - \* 공정위 입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정부의 개입에 따른 사적인 영역 침해 등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부정적
  - 하도급법에 협동조합의 단가조정 및 협상 대행권 도입
    - \* 공정위 입장: 담합에 의한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

##### □ 정책과제

- 하도급법 개정내용 보완 추진 필요
  - 협동조합의 협상대행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공정거래법 등에서 가능한 부문은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도록 노력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협상의 형태에 따라 조합이 대행 가능한 부문의 적용방안 마련
  -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수주기회 제한, 거래

단절 등 보복조치 관련 사항도 반영 추진 필요

\* 양 당사자간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관련 사실을 공정위에 통  
보토록 의무화 등

○ 계약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원자재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표준  
약정서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KIKO 등 환헛지 상품에 대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대처

### □ 현황 및 문제점

- 환율하락에 대비하여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환율상승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발생
  - \* 환헛지 피해기업 접수결과(중소기업중앙회) '08.6월말 현재 199개 업체, 기정산액 1,725억원, 평가손실 5,713억원
-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범상 불공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

### □ 정책과제

- 은행의 중소기업 KIKO거래 불공정판매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 금융위, 중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KIKO 관련 기업피해 사례 접수·처리 및 후속조치 마련
  - 중소기업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KIKO 관련 민원·분쟁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불공정 판매여부 조사 필요
- 중소기업 대상 환 리스크관리 교육 강화 방안 강구
  - 11개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하여 KIKO, 환변동보험 등 환 리스크 관리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교육 강화

### (3)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은 내수경기 의존도가 크고 경기변화에 민감하여, 최근의 소비둔화·경기침체로 더욱 어려운 상황
  - \* 소상공인 체감경기 BSI : ('08.1)79.3 → ('08.3)83.0 → ('08.5) 83.7
- 자영업자들은 창업준비기간이 짧고(6개월미만 63%) 생계형 창업 위주이며 경영 역량이 미흡하여 수익성도 악화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통해 복지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주체로서 민생경제의 튼튼한 근간을 마련할 필요

#### □ 정책과제

-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공급의 연차적 확대 필요
  - 기 시행중인 'New-Start 1조원특례보증'을 차질없이 추진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07.11)의 실효성 확보
  -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1.0~2.0%) 사용 활성화를 위해 조세 지원 확대방안 강구
  - 직불카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 공제한도 확대
-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필요
  - 상권정보시스템 보완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5단계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성공률 제고

- 슈퍼마켓 체인본부 구성 등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자생력 배양 지원
- 업종단체별 경영개선교육 및 상담사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4) 전통시장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개선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빈점포가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매출은 지속 감소
  - \* 일매출 증가율 : 시설종합개선시장 24.1% ⇔ 미개선시장 △17.8%
  - \* 빈점포율 : 시설종합개선시장 4.3% ⇔ 미개선시장 20.5%
- 대형마트 확산,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 재래시장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전반적인 매출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
  - \* 재래시장 매출(조원) : (01) 40.1→(03) 36.0→(05) 32.7→(06) 32.0
- 시설현대화 사업은 공사기간 과다소요, 지방비 및 상인 자부담 확보 문제 등으로 실 집행율이 저조('07년 49.6%)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 정책과제

-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
  - 도시형 시장은 젊은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방형 시장은 지역특산품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형으로 개발
  - 특성화 시장에 대해 문화시설·상징물 등 기능별 시설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
- 대도시의 전통시장·상점가·지하상가 등 인근 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상권전체를 개발하는 지역상권관리제도 도입
  - 상권 활성화가 가능한 상권 및 구도심 침체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관리 집중 지원

-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전통시장의 인지도 제고와 우수시장의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공중파·케이블·지역민방을 활용한 홍보 강화 필요
- 1시장 1주차장 및 택배시스템 구축 지원
  - 차량이용 고객이 많은 중·대형시장에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고, 차량이용이 적은 골목시장은 전화주문이 가능한 택배시스템 구축
-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점검(경쟁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통시장의 유형별·특성별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필요
  - 시장의 입지특성, 상권크기 등에 따라 근린생활형시장, 지역중심형시장, 광역상권형시장, 정기시장 등으로 분류하여 시장별 차별화된 지원 추진
- 시설현대화 사업 집행을 제고방안 강구
  -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연구용역 실시, 민간부담 확보 등을 유도하여 준비기간을 앞당기고, 사업준비가 완료된 시장부터 사업비를 교부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



## (5) 미취업자의 취업 연계제도를 통한 인력지원 활성화 대책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인력부족 실태
  -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의 양적·질적 불일치 심각
    - \* '07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3.93%로 9만명 수준임  
(중기청, '07년 인력실태조사)
  - 기술직 및 기능직 분야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심화
    - \* 직종별 인력 부족률: 기술직('06년 4.55% → '07년 3.79%)  
기능직('06년 6.20% → '07년 7.40%) 단순 노무직('06년 2.93% → '07년 3.16%)
    - \* 중소기업 규모별 인력 부족률: 5~9인(5.21%), 100~299인(2.7%)
- 중소기업 인력부족 원인
  - 열악한 작업환경, 대기업과 임금·근로조건 격차 등 수요측 요인
  - 교과과정과 중소기업 현장 수요간의 불일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부족 등 공급 측 요인

### □ 정책과제

- 공고생 대상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과 공고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실업난 완화
  - 공고 외에 전문대로 확대 시범운영 추진 필요
-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을 청년미취업자 외 여성, 장기군복무제대자 등으로 확대·시행

○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고용 확대방안 검토

- 고물가, 경기부진, 일자리 부족으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고용불안이 더욱 심한 실정이므로, 장애인 등의 고용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6)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안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실태
  - 중소기업 규제영역이 업종·입지·규모·성장단계에 따라 복잡·다양
    - \* 총리실 등록규제 5,274건 중 3,550건(68%)이 중소기업 관련 규제('07.12월말)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제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큼
-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상의 문제
  - 기존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06.9, '07.6, '08.6)』 과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08.6월)』 은 그 효과가 중소기업 중 일부에 한정
  -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없어 규제 소관부처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함

### □ 정책과제

- 현장밀착형 중소기업 애로해소 시스템의 지속적인 추진
  - 지방중기청을 현장기동반으로 재편하여 중소기업과 함께 발로 뛰며 현장애로를 해결토록 추진할 필요
-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 상시적인 중소기업 규제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DB」 구축 요망

- ‘규제모형’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특성별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추진과제 발굴방안 강구
- 중소기업 규제유연화제도 도입
  - 각 행정기관이 법령 등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제도화할 필요 있음

## (7) 가업승계 세제개편을 통한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창업세대 CEO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로 가업승계가 사회경제 현안으로 등장
  - \* 60세이상 CEO의 고령화율 : ('93) 10.6% ⇒ ('06) 16.1%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과중한 조세부담
  - \* 과중한 조세부담 78.2%,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 역량 41%, 창업 후세대가 승계를 원치 않음 16.9% (중기연구원, '07.12)
- 지난 해 가업승계 상속세를 완화했으나 중소기업계는 미흡하다고 인식
  - \* 세법 개정내용에 중소기업의 7.5%만이 만족 (중기연구원, '08.4)

### □ 정책과제

- 가업승계 상속세 추가 완화 요망
  - 과세형평성,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업계가 요구한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상속요건 완화 등 가업상속 부담 완화 추진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 내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통한 종합적 지원방안 강구
  - 컨설팅(세무, 법률, 경영 등), 후계자 양성 교육, 가업승계의 인식 개선,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 일반행정부문 지원대책

### (1) 서민 생계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현황 및 문제점

- 고유가시대에 교통 부문의 에너지소비증가율(2.4%)이 산업부문(2.2%)보다 크므로 수송에너지 절감대책 필요
  - 에너지 소비 절약, 사회적 비용(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절감, 내수 진작 등 차원에서 경상용차 보급지원이 필요

#### □ 정책과제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방안
  - 현재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 '08년 66%, '09년 33% 감면하고 있으나, '07.12.31까지 등록차량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하는 방안 추진 필요
- 경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조치 확대
  - 경형 상용차(다마스·라보 등)가 서민생계 수단으로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감면액을 50% → 100%로 확대 요망

## (2) '08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지만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역전현상”이 발생
- 재산세 상한선을 정해둔 '세부담 상한제'는 주택 보유 가구(6억 원 초과)에 따라 재산세를 크게 올린 상승요인이 됨

### □ 정책과제

-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 적용 비율 동결 요망
  - 금년도 재산세분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 (3) 기타 서민경제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국제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의 확대 필요(현행 버스·화물차→연안 화물선, 농·어민에까지)
- 부동산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건설경기가 퇴조하면서 일자리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각종 억제정책을 완화해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 □ 정책과제

-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위한 주행세 인상 필요
  - 운송사업자·농어민에 대한 경유가격 상승분의 50%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 표준세율 인상(32%→36%) 및 탄력세율 범위 확대(±30%→±50%)
    - \* 주행세율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을 인하하여 유류가격은 중립 유지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사항
- 하이브리드카 취득·등록세 감면방안 추진 필요
  - 에너지절약형 차종인 하이브리드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50% 감면 필요
    - \* 지방세법 개정사항
-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필요
  - 분양가의 2% → 1%



#### (4) 서민 고충 해소 시책 추진

##### □ 현황 및 문제점

- 대외여건 악화로 실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서민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 행정안전부의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 마련·시행이 필요

##### □ 정책과제

-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방안
  -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
  - 개인서비스요금 오름세 차단을 위한 지자체별 노력 강화 필요
- 새마을금고 서민금융 확대방안
  - 저신용자 대출제한 완화를 위한 여신업무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 개발 등 지속 추진 필요
- 저소득층에게 공직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5. 국토해양부문 지원대책

### (1) 주택시장 안정 및 지방미분양 대책

#### □ 부동산시장 현황

- '06년 급등세를 보인 주택가격은 최근 안정세 유지
- 아파트 미분양은 '06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08.3월 13만호를 넘어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최근 다소 감소

#### □ 정책과제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근원적 시장안정방안 강구
  -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중심으로 차질없는 주택공급
  - 산지·구릉지·한계농지 적극 활용 등 택지의 안정적 공급
- 지방미분양 해소대책 추진 필요
  -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방 미분양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① LTV 상향(분양가 10% 이하시 60%→70%) 및 모기지보험 확대
  - ② 취·등록세 50% 감면(분양가의 2%→1%)
  - ③ 기존 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 연장(1년→2년)
  - ④ 매입임대 세제혜택 확대
-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 주택기금에서 장기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이 낮아 현행의 가산점제도나 국

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에 불구하고 주거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의 확대, 임대료 보조, 주거수당 지급, 주택바우처 등 지원방안 검토 필요

○ 임대료 동결 등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방안 필요

-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조치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 국민임대주택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확대·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 뉴타운 관련 보완대책 마련

- 원주민의 정착률이 낮은 문제와 세입자 보호대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건교부에서 '07년도 내에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합해 6000세대를 이전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로 이전한 가수는 436가구에 불과하므로, 충실한 목표 이행 필요
- 뉴타운 철거민의 이주권 보호 대책 필요

## (2)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개선

### □ 건설경기 현황

- 건설투자는 '04~'07년간 SOC 투자 정체, 최근 민간 건축경기부진 등으로 둔화세 지속

\* SOC 예산 증가율(%) : ( '04)  $\Delta$ 5.3  $\rightarrow$  ( '06) 0.9  $\rightarrow$  ( '07) 0.0  $\rightarrow$  ( '08) 4.4

\* 건설투자증가율(%) : ( '04) 1.1  $\rightarrow$  ( '05)  $\Delta$ 0.2  $\rightarrow$  ( '06) 1.2  $\rightarrow$  ( '08.삼)  $\Delta$ 0.9

- 건설취업자수는 정체된 가운데, 건설업체 부도는 증가

### □ 정책과제

-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해외건설 활성화 필요

- 공기업의 SOC 투자물량 확대 및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 투자 확대
- R&D 투자확대, 진출전략 다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해외건설 수주지원 확대 필요

- 기업부담 감소와 거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강구

-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이 안정된 지방을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 대책 강구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위축방지대책 강구

### (3) 고유가 극복 및 대중교통 활성화

#### □ 교통·물류업계 현황

- 운송비용중 유류비 비중이 큰 구조로 경영부담이 가중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는 경영이 크게 악화(매출액중 유류비 비중 : 시외버스 38%, 화물차 64.4%)
  - 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택시도 경영 악화
  - 항공·철도·해운업계는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年 1,073억원 추가부담
    - \* 항공 425억원, 외항항운 600억원, 연안해운 32억원, 철도 16억원
- 유가급등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 교통량은 크게 감소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

#### □ 정책과제

- 영세 교통·물류업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 필요
  - 버스·화물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대상 확대
- 화물운송시장 구조 선진화
  - 불법다단계 운송 및 지입제 개선 필요
  -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
- 건설기계업계 시장구조 개선
  - 표준임대차 계약서 적용확대 및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기계

## 분야 거래관행 개선

### ○ 에너지 절약형 교통·물류체계 전환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및 에코-드라이브 지원방안 강구
-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공공대형건축물에 시범도입,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 ○ 서민생활교통비 부담경감

-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무궁화·새마을호 기본운임 인하, 버스 준공영제 확대·환승할인 등을 통한 서민버스요금 부담 완화

### ○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 및 수요전환 대비 지속적 추진

- 버스 중앙차로제 지속확대, 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 등을 통해 버스 이용편의 확대
- 경원선, 중앙선에 광역급행 열차 운행,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체증 완화
- 도시철도 예비차량 증편, 광역철도 배차간격 단축, 버스 출퇴근 수요 집중노선에 예비차 투입 및 집중배차 등을 추진

## 6. 교육부문 저소득층 지원대책

### (1) 대학등록금 안정화 및 학자금 지원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08년 대학 등록금 인상율이 전년대비 6~10%로 물가상승률의 2배 수준

#### < 최근 5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 현황 >

(단위 : 천원, %)

연 도	'04		'05		'06		'07		'08*	
구 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2,903	9.4	3,115	7.3	3,423	9.9	3,775	10.3	4,167	8.6
사립대	5,776	5.9	6,068	5.1	6,473	6.7	6,893	6.5	7,383	6.7
물가인상률	3.6%		2.8%		2.2%		2.5%		3.9%*	

-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기준금리도 높아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

#### □ 정책과제

- 대학재정 투명성 확보를 통한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유도
  - 대학 예·결산 내역 공시 적극 추진
  - 결산 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 이행 확인
  - 등록금 예고제 실시 적극 유도

○ 장학금 지급 확대

- 기초생보자에 대한 무상장학금, 이공계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급 확대

○ 학자금 대출 및 대출 이차지원 확대

- 학자금대출 금리부담 경감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 필요

○ 학자금 재원 확충 및 수혜폭 확대, 맞춤형 학자금 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양화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에 분산된 장학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하여 학자금 수혜폭을 확대하고, 학생의 소득·성적 등에 적합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연계대출(ICL: Income Contingent Loan, 등록금후불제) 도입방안 적극 검토



## (2)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직자 자녀 학비 지원 시작('98, IMF)
  - 2005년부터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을 시·도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방 이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06)
    - ※ 특별교부금 지원 : 492억원
  -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 국민생활 불편해소 추진과제로 선정('08.6.10)
  
- 지원현황(2007년도)
  - 차상위 계층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 2,010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 522억원
  - 차상위 계층 중·고생 자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지원 중 : 94억원

### □ 정책과제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모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 소요재원 : 연간 783억원 (시·도교육비특별회계)

### (3)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지원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198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작
  - 2004년 급식지원 관리체계 개선(학교급식 교육부, 학교 밖은 복지부)
  - 2005년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정부혁신지방분권위)
  - 2006년 지원대상과 지원액 등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 지원현황
  - 전체학생의 18%인 142만명에게 3,314억원 지원('08)
    - ※ 저소득층 62만명 전액지원(2,322억원), 농산어촌 80만명 일부지원(992억원) ⇒ '07년 대비 지원인원 6만명, 지원예산 518억원 증가
  - 소요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 □ 정책과제

- 저소득층 급식지원을 모든 차상위계층 학생까지 확대 지원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은 급식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
-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아동 중 방학·공휴일 및 저녁 급식 누락 아동이 없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적인 점검체계 마련
- 지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결식아동이 발생될 경우(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누락 377개소) 중앙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필요

#### (4) 방과후학교제도 개선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 '04년 이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 교실 설치 지속 확대
  - '07년 10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1,835,263명) 대비 2.7%(50,247명)가 방과후 보육 교실 이용 중
- '07년 초등 방과후 보육 교실 지원 내용
  -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757개 교실의 시설비 및 1,630개 교실의 운영비 지원
- 지역아동센터사업과의 비교

부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비고
사업명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이용아동	18세 미만(빈곤아동중심)	초·중·고등학생	
장소	전용공간	학교교실	
시설수	2,618개소	10,979학급	
이용아동수	76,229명	240,698명	
주요활동	보호, 문화, 교육, 복지, 심리정서적지지, 가족지원,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	특기적성, 학습지도, 특별활동 프로그램	
'08 예산	551억원	3,400억원	지방비 포함
기관당 연평균 예산	2천1백만원	3천1백만원	평균 1.5배
시간당 평균 강사비	5,892원 *	27,196원	평균 4.6배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교사사업 전일형교사 월급여 기준(82만5천원÷35시간÷4주)  
 자료 : 강명순의원실

## □ 정책과제

### ○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 필요

-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빈곤층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방과후학교 사업이 학습·특기교육 중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지역아동센터사업에 비해 예산지출규모는 크면서 교육내용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방과후학교의 질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 방과후학교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사업간의 예산 조정 필요성

- 방과후학교 사업비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의 차이가 과다하여 빈곤층 자녀들의 심리정서문제·ADHD·우울증·학습부진 등 복합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일·유사 사업간의 예산조정방안 검토 필요

### ○ 농어촌 및 빈곤아동청소년 복지 지원예산 총액의 상향조정방안 검토 필요

## (5) 학원비 및 학습지비 인상 억제

### □ 현황 및 문제점

- '08.6월 학원비는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6.1% 상승
  -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2~3월에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학원비 상승은 미미
    - ※ 7월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 중 학원비 : 대입(단과, 종합), 고입(단과, 종합), 보습, 피아노 학원
- 신학기에 높은 인상률을 보이는 것은 인건비, 관리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신학기 학원비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교사, 소비자 단체 등(10명 내외)이 참여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 180개 지역교육청 중 172개 지역교육청에서 구성·운영('08.6)
-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회 위반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교습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도조례(규칙) 개정 권고
    - ※ '08.7월 현재 16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처분기준을 강화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정 권고
- 수강료 표시제 시행
  - 학원의 수강생 모집 광고물(인터넷 및 인쇄물)에 수강료를 의무적으로 표시·공지토록 함으로써 수강료 편법·부당인상 사전 예방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07.9.23 시행)

□ 정책과제

○ 수강료 정보공개 프로그램 개발 및 공개

- 학원 수강료 정보공개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고 수강료 안정화 도모

○ 수강료 편법징수 방지 등 적정관리 방안 지속 추진

- 체감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수강료 초과징수 및 수강료 표시제 이행 등 지속적 지도·점검 독려

## 7. 농어가 지원대책

### (1) 고유가 등에 대응한 농어가 경영안정방안

####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곡물·원유 가격 급등으로 농자재 가격 상승 초래
  - \* 농업용 면세유 : ('07 평균) 651원/ℓ → ('08.6) 1,276 (96% 증)
  - \* 어업용 면세유 : ('07 평균) 503원/ℓ → ('08.6) 990 (96% 증)
  - \* 복합비료 : ('07 평균) 9,850원/20kg → ('08.6) 22,000 (123% 증)
  - \* 배합사료 : ('07 평균) 335원/kg → ('08.6) 436 (30% 증)
- 농자재 가격상승은 유가상승으로 인해 촉발된 구조적인 문제로 당분간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 국제유가(두바이유) : ('07.12) 89.3\$/bl → ('08.7.21) 127.7 (43% 증)
-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농어업경영비도 동반하여 급등

(단위 : 천원)

구 분		2007(A)	2008.7.기준(B)*	B/A(%)	
쌀(10a당)	경영비	364	398	9	
	소득	490	456	△7	
시설작목(10a당)	경영비	9,550	12,701	33	
	소득	8,033	4,882	△39	
축산	비육우(두당)	경영비	4,099	4,580	12
		소득	1,459	978	△33
	비육돈(두당)	경영비	190	222	17
		소득	56	24	△57
	육계(10수)	경영비	12	15	25
		소득	2.8	0.5	△82

\* '08년도 가격, 생산량을 '07년 수준으로 가정하고, 농자재 가격상승을 반영·산출

- 경영비 상승으로 특히, 시설·축산농가, 유류소모가 많은 근해어선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

- 시설농가는 난방비 부담으로 금년 겨울을 넘기는 것이 당면 과제
- 근해어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어 출어포기 등 발생

## □ 정책과제

- 농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기 가격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농자재 가격 인상분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
  - (유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어선 감척 확대, 면세유 공급량도 실수요량에 맞추어 확대 추진, 유류환급금 기준 인하 검토
  - (사료) 저리(1%)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1조원 → 1.5), 긴급할당관세 무관세 등 세제지원 확대
  - (비료) 화학비료 가격상승분 일부 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비료가격안정기금 신설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에너지 구조 전환 및 사료·비료 공급안정화 시책 마련
  - (총괄) 농기계 임대(경종), 사육환경개선·방역(축산), 총어획량관리·자율관리어업(수산) 활성화를 통해 비용절감형 생산구조 정착
  - (유류)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및 농산 폐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 및 어업용 소형전기어선 추진시스템 개발
  - (사료)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해외농업개발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사료 공급선 확보
  - (비료)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감축



## (2)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 □ 현황 및 문제점

- 유류유출사고('07.12.7)로 충남·전남·전북지역에 광범위한 피해 발생
  - 사고개요 : 충남 태안 만리포 북서방 5마일 지점, 예인선(삼성 T-5)에서 분리된 부선이 정박중이던 유조선 (HEBEI SPIRIT)과 충돌, 원유 12,547kl 유출
  - 수산분야 피해신고('08.7.14) : 66,016건 (비수산분야 : 15,457건)
- 피해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업재개 및 경영난 해소 지원(既조치)
  - 피해지역 주민 생계 안정 지원 주요 내용
    - ※ 긴급생계안정자금 1,172억원(충남 994, 전남 178) 지원('07.12)
    - ※ 저소득층 피해주민(14천세대) 및 어촌계(114개소)에 쌀(318톤) 및 의약품(114세트) 지원('08.4)
    - ※ 피해지역 어업인을 고용하여 오염된 굴양식시설(43ha) 철거 (135억원)
  - 어업경영 정상화 지원 주요 내용
    - ※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선어업('08.4) 및 마을어업('08.5~6) 조업재개
    - ※ 정책자금(836억원) 상환연기('08.3) 및 특별영어자금(250억원) 지원('08.4)

### □ 정책과제

- 피해주민 생계안정, 조업준비 지원을 위해 미지급된 방제인건비를 정부에서 대지급

- 피해어업인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보상지원 활동 강화
  - IOPC 보상한도(3,216억원) 초과 피해액은 특별법에 의해 지원
    - ※ 피해액 확정전 일부 금액 대부방안 검토
  - 공공근로사업 실시 등을 통해 피해주민 생계 어려움 최소화
- 조업재개 확대, 수산물 소비촉진 등 어업 정상화 도모
- 생태계 복원 및 해수욕장 개장
  -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고시 및 복원계획 수립·추진 필요
-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 단일선체 유조선 국내운항 조기금지, 정유사의 단일선체 이용률 저감추진
  -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오염피해에 대비하는 추가기금 협약 가입 검토

### (3)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획

#### □ 현황 및 문제점

- 7.23~26간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강원·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발생
  - \* 누적강수(23~26일) : 동두천 377mm, 파주 342, 봉화 337, 횡성 334, 서울 190
- 농작물 침수 : 1,005ha(경기 544, 강원 43, 충북 60, 경북 263, 인천 95)
- 비닐하우스 파손 : 362동(충북 45, 경남 317)
  - \* 경남 합천 : 돌풍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피해 발생
- 농경지 유실·매몰 : 399ha(강원 1, 충북 33, 경북 365)
- 가축 폐사 : 닭 19,000수, 소 20두, 돼지 48두, 꿀벌 410군 등
  - ※ 어업부문은 피해가 미미함(송어 1,500마리 폐사)

#### <경북 봉화군 농업피해(최대 피해지역)>

- ◇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춘양면 등에 대형피해 발생
  - 농경지 침수 : 572ha(침수 207, 매몰 244, 유실 121)
    - 작물별 : 벼 263ha, 고추 63, 채소 55, 인삼 54, 기타 137  
(밭작물, 과수 등)
    - 읍면별 : 춘양 399ha, 물야 81, 석포 27, 법전 20, 소천 17, 기타 28
  - 가축 폐사 : 소 20두, 돼지 48, 꿀벌 410군
    - \* 일반 피해 : 인명 8(사망 4, 실종 4), 주택 182동, 이재민 385명, 도로 101개소 등

- 유관기관 합동 비상근무 및 농작물 침수방지대책 추진
  - 유관기관 합동으로 1차 상황판단회의(7.23) 개최 후, 비상근무 돌입 등 사전대비 실시
    - \* 배수장 77개소 가동, 저수지 69개소 응급방류 등 추진
- 피해가 심한 봉화(경북)·합천(경남)군에 초동대응팀·기술지원반을 파견(7.28~29)하여 응급복구 지도 및 애로사항 청취
  - 식량정책단장을 반장으로 식량·원예 등 전문가로 구성·파견

## □ 정책과제

- 피해 농업시설물 및 농작물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
  - 침수 농작물에 대한 긴급 병해충방제 및 피해농경지 응급복구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급복구인력 및 구호물품 긴급 지원
  - 농자재 우선 공급 및 농기계순회 무료봉사단 운영
-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여 조속한 영농재개 도모
  - 피해농가에 대한 직접복구비와 생계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지원
  -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긴급지원 요망